

14차시 [성폭력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가?]

<학습목표>

학교폭력 중 성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사안으로 조사하여 자치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및 강간죄에서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교폭력 중 성폭력의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법규정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성폭력 교육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전문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한 내용 및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 및 강간죄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상해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사례>

사건의 개요

S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J는 소위 학교에서 '일진 짱'으로 알려진 학생이었다. J는 2011. 12. 8. 후배 남학생 2명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 또한 2011. 12. 중순 경 일요일 밤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12세) A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또한 2011. 12. 20. 경에는 평소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고 생각하던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여학생 B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불러 낸 다음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포르노를 보여주고, 가슴을 만지거나 톡톡 치면서 가슴이 적다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후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B를 강간하려 하였다. B는 당일 저녁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원스탑지원센터에 신고를 하였고, 원스탑지원센터는 S고등학교로 신고했다. S고등학교는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이므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 다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 하였다. 오랫동안 해당지역에 거주해온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치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라는 설을 확인하고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동네에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여 성폭력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J의 강간으로 인하여 A와 B는 각각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편 A와 B는 J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 받은 S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S고등학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경우도 강간죄의 상해에 해당하나?

성폭력 범죄자인 J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은 어떤 규정이 있나?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 중 성폭력의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법규정과 관련하여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는 가 하는 점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에도 강간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가 하는 점 및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얼굴 및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건의 결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는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성폭력의 경우도 학교폭력의 범위 속에 포함시켰으나(동

법 제2조 제1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동법 제5조 제2항) 이유는 성폭력피해자의 프라이버시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만, 강간과 같은 성폭력은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성폭력 사건의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사건조사과정에서 제2차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고, 증거 확보 및 피해자 보호 등이 중요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신고 받은 S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폭력 사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은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고등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S고등학교 장의 명의로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며,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 대인관계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여 이로 인하여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증상은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의 경우도 강간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위 사례에서 J는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만19세 미만자)인 피해자 B(만12세)를 간음 하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A에 대한 열람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고, 인터넷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

얼굴공개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어디까지가 성폭력인가? - 동영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의 정의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1)형법 제242조(음행매개) · 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

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등)의 죄, 제6조(특수강간등)의 죄,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의 죄,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의 죄,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의 죄,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죄, 제12조(미수범-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죄,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6) 위 (1) 내지 (5)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와 성폭력의 포함여부 - 동영상 강의

2008. 3. 14. 개정법률에서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동법 제2조 1호 및 제5조2항). 성폭력 중 경미한 범죄인 성추행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시행령 제2조). 하지만 강간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 개정논의에서 강간과 같은 성폭력속 여미한 비행이 아니라 중대한 성격의 범죄 또는 비행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아니라 형법,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소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강간 등 중대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내릴 수 없다.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3. 친고죄와 고소 및 공소시효

친고죄란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고죄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위 친고죄에 대하여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여 이로 인하여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증상은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상해에 포함된다.

5.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관련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며,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지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는 성명,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이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www.sexoffender.go.kr)'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정보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넷상

공개하고 있다.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만 19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수사 단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신원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성폭력 범죄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 신고자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 이들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신고자 또는 고발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③ 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

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영상물의 촬영·보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⑤ 증거보전의 특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의무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8. 재판 단계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① 소송진행의 협의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 및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신속한 재판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복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을 종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진행과 판결 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③ 심리의 비공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④ 전문가의 의견 청취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조회 결과 성폭력범죄 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증인신문시에는 물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실에서의 증인신문시에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⑥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

법원이 일정한 성폭력범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는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성폭력의 경우도 학교폭력의 범위 속에 포함시켰으나(동법 제2조 제1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동법 제5조 제2항) 이유는 성폭력피해자의 프라이버시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만, 강간과 같은 성폭력은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성폭력 사건의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사건조사과정에서 제2차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고, 증거 확보 및 피해자 보호 등이 중요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

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며,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 정, 대인관계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여 이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면 성폭력범죄의 상해에 해당한다.